

經濟發展의 메커니즘과 韓國經濟의 未來⁽¹⁾

李 之 舜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일, 기술수준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일,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經濟成長의 필요조건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참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기술수준이나 효율성이 일류가 못되더라도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데 성공하면 하위 후진국 즉, 최빈국을 상위 후진국으로 변모시켜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효율성이 일류가 못되더라도 투입생산요소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감과 동시에 기술수준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데 성공하면 후진국을 중진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많은 생산요소를 투입하고 제아무리 앞선 기술을 개발 하더라도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패하면 중진국을 선진국으로 변모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上位 中進國에 속한 한국경제가 해야 할 일은 30% 정도의 투자율을 유지하면서 끊임없는 기술투자를 통해 최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보다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의 기술보유국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아직 상당한 정도 뒤떨어져 있는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일이다. 즉, 投資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바를 더 잘 하고, 技術開發의 측면에서는 가일층 분발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서고, 경제운영의 效率性 측면에서는 이제까지의 비능률을 과감히 탈피하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한국경제는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선진국이 될 것이다.

1. 머리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經濟水準을 크게 後進國, 中進國, 先進國으로 구분한 다음, 전 세기 중반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에 걸쳐 발생한 移動頻度(transition frequency)를 조사해 보면, 그룹 內 移動(within group transition)이 그룹 間 移動(inter group transition)보다 압도적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초 선진국에 속하던 나라는 예외 없이 지금도 선진국에 속하여 선진국에서 중진국 또는 후진국으로 이행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당초 후진국에 속하던 나라의 경우에도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후진국 그룹에 머문 나라가 90%에 이르러 그룹 내 이동이 그룹 간 이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중진국은 다른 그룹에 비해 그룹 간 이동의 빈도가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중진국에서 후

(1) 본 연구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진국으로 떨어진 나라도 있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소득수준을 均齊狀態(steady state)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나타낼 때 선진국 및 후진국 그룹은 安定的인 均衡(stable equilibrium)을 이루고 있음에 비해 중진국 그룹은 不安定한 均衡(unstable equilibrium)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均齊상태가 안정적이면 어떤 교란요인으로 의해 均齊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다시 그곳으로 회귀하는 속성을 지녔는데 비해 均齊상태가 불안정하면 그곳에서 벗어날 경우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均齊상태를 향해 이동해 가는 속성을 갖는다.

先進國 그룹은 안정성이 높아 거기에 속한 나라가 중진국이나 후진국으로 퇴보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선진국 그룹의 특징을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1人當 國民所得 분포의 표준편차는 점점 작아지나 그 평균은 점점 커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선진국 그룹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에서 소득수준의 수렴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평균소득은 점점 더 커진다.

後進國 그룹도 안정성이 높지만 선진국 그룹처럼 완전하지는 않아 후진국에 속한 나라 가운데 소수는 중진국 그룹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한다. 후진국 그룹에 속한 나라를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분포도를 그려 보면 분포의 우측 대역은 처음보다 넓어졌지만 평균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값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의 평균치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채 분포의 오른쪽 대역이 넓어져 다수의 후진국은 지금도 처음과 같이 아주 가난하지만 그중 소수는 약간이나마 소득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반면 中進國 그룹에 속한 나라는 중진국 그룹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후진국으로 퇴보하거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세 가지 가능성을 지니므로 다른 그룹에 비해 생태적으로 이동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타 그룹에 비해 安定性이 떨어지는데 이는 중진국 그룹에 속한 나라가 다른 그룹에 속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力動的으로 변화함을 나타낸다. 중진국에 속한 나라를 대상으로 1人當 國民所得의 분포도를 보면 분포의 대역이 초기보다 대폭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그 중심이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득분포의 標準偏差와 平均 모두 처음보다 월등히 커졌다.

후진국 그룹에서 중진국 그룹으로의 이동, 중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의 이동, 중진국 그룹에서 후진국 그룹으로의 이동, 선진국 그룹에서 중진국 그룹으로의 이동 등 그룹間 移動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후진국 그룹에서 중진국 그룹으로의 이동과 중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는 上向移動이다.

당초 後進國이었다가 中進國으로 이동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칠레 등을 들 수 있다. 후진국 그룹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국가만이 중진국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음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 中進國이었다가 先進國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한 나라로서는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탈리아, 핀란드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당초 후진국이었다가 이 기간 중에 중진국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물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데에도 성공한 나라이다. 싱가포르가 그 예로서 싱가포르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후진국이었으나 지난 50여 년에 걸쳐 경제발전을 거듭한 결과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남한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龍' 또는 '東아시아 新興工業國家' 라고 불리던 데서 알 수 있듯이 50년 전 출발선 상에서의 경제상황은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나라마다 사정이 크게 달라져서 싱가포르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했고, 홍콩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 합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통치권이 중국으로 환원된 이래 발전이 정체되어 (상위)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남한과 대만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후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여 여전히 (중위) 중진국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관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오직 몇 나라만이 그렇게 하는 데 성공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의 그룹 간 이동을 실현하여 매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다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두 번에 걸쳐 그룹 간 이동을 이루는 데 성공한 싱가포르나 아직 선진국에 합류하지는 못했으나 대단한 성과를 거둔 홍콩의 업적에는 크게 못 미침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업적을 이룩하여 지금쯤 上位 中進國 또는 下位 先進國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무슨 까닭에서인지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룹 내 이동 또는 그룹 간 이동이 더 잘 살게 되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란 법은 없다. 실제로 비록 빈도수는 낮지만 그 반대의 방향 즉, 점점 더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도 생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상위 중진국 수준에서 퇴보를 거듭하여 중위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위 중진국 수준으로 회복한 후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하위 중진국 수준까지 나아갔다가 經濟危機를 경험한 후 현재는 상위 후진국 수준으로 회복해 있다. 필리핀은 상위 후진국 수준에 도달한 이후 경제발전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중위 후진국으로 퇴보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명실상부한 군사 대국으로 주변국가의 맹주가 되었으나, 공산

권이 붕괴된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지금은 중위 중진국 수준으로 퇴보해 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선진국 대열에 낄 정도로 앞서기도 했으나 20세기 내내 쇠락해온 결과 지금은 중위 중진국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힘겨운 처지가 되었다. 북한은 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한 때 상위 후진국에 들어갈 만큼 발전하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발전의 역동성을 상실하여 지금은 하위 후진국 수준으로 퇴보하였다.

그룹 내 이동과 그룹 간 이동을 비교해 보면 그룹 내 이동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룹 간 상향이동이 주는 혜택이 그룹 내 상향이동이 주는 혜택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룹 내 이동의 빈도가 그룹 간 이동의 빈도보다 높다는 사실은 그룹 내 이동의 비용이 그룹 간 이동의 비용보다 훨씬 더 작음을 시사한다. 즉, 그룹 내 上向移動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그룹 간 上向移動은 여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룹 내 下向移動의 빈도가 낮지 않고 그룹 간 下向移動의 예도 전무하지는 않은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그룹 내에서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만 해도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위 그룹에서 상위 그룹으로 옮겨가는 그룹 간 상향이동은 그룹 내 상향이동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난 업적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그룹 간 상향이동을 반복해서 실현함으로써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성과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의 이동 또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을 '어려움'이라고 나타낸다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해 가는 일은 '어려움×어려움'에 해당하는 일로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²⁾

이러한 豫備的 觀察(preliminary observations)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필자가 관심을 갖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이 각국의 長期的 所得水準을 결정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나라는 아주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중간 정도로 잘 살고 또 어떤 나라는 아주 못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한 나라를 선진국, 중진국 또는 후진국이 되게 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나라는 所得의 持續的인 增加를 시현해 점점 더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반해 많은 나라들은 소득증가가 정체되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2) 20세기 중반 이후에 두 단계 점프에 성공한 나라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그러나 좀 더 긴 기간을 두고 보면 일본과 아일랜드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두 단계 점프에 성공한 나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거나 所得減少를 경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그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셋째, 위 물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각국의 經濟成長率을 관찰해 보면 長期 平均成長率이 5% 이상으로 아주 높은 스무 개 정도의 나라들과 성장률이 2% 내외인 서른 개 정도의 나라와 성장률이 1% 미만인 백 개 정도의 나라와 성장률이 마이너스 값인 스무 개 정도의 나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각국의 長期成長率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다시 말해 왜 어떤 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많은 나라들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는 것일까?

넷째, 역시 위 물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성장률이 0보다 큰 나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잘 살게 된다. 성장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률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현재의 그룹을 뛰어 넘어 타 그룹으로 이동한다.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룹 內 上向移動과 그룹 間 上向移動이다. 그렇다면 그룹 내 상향이동과 그룹 간 상향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의 메커니즘은 동일한 것인가, 다른 것인가? 바꾸어 말해 그룹 내 상향이동을 달성하는 데 그치는 나라에 비해 그룹 간 상향이동을 이루어내는 나라는 무엇이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다섯째,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룹 간 상향이동을 이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현재의 상태는 中位 中進國에서 上位 中進國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고 있을 뿐 아직 선진국 그룹으로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하위 후진국에서 중위 중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동인이 우리나라를 현재의 중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여섯째, 위 물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고쳐나가야 先進國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할 때 과연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그러한 變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일곱째, 우리나라가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移行하는 일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측면에서 國際情勢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만큼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국제정세의 변화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덟째, 위 물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北韓의 존재가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므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발전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南北韓 間의 關係 變化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이다. 그렇더라도 그 가능성에 따라 몇 가지 예상되는 변화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으며 각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남한의 발전 경로를 알아내는 것은 가능하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감안할 때 남한이 앞으로,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채 중진국에 머물 것인가, 선진국 진입에 실패함은 물론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 언제인가는 선진국으로 이행할 것인가 등을 물을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위에서 제기한 일련의 물음에 대한 합당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이룩한 經濟成長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의 요체를 정리한다. 이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기본적인 틀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어 제3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이론 및 실증 연구의 요체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각국의 경제성장 성과를 이해하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각국의 長期的 所得水準 및 所得增加率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여기에서는 또한 그룹 내 또는 그룹 간 이행의 과정에 관해서 상세하게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그룹 내 상향이동을 촉진하고 또 어떤 요인들이 그룹 간 상향이동을 촉진하는가 알아내는 데 주력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經濟發展 樣相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나라가 어느 곳을 향하여 움직여 나아갈 것인가 알아본다. 이 논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우리의 현 상황에 시정해야 할 요소가 많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중 무엇을 어떻게 改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심도 있게 고찰한다. 우리가 그러한 개선 작업에 성공한다면 중위 중진국인 현 위치에서 탈피하여 선진국을 향해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또한 國際情勢의 예상치 않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가 지속적 발전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특히 북한의 존재가 남한의 발전 경로에 대해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일지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알아본다.

2. 經濟成長의 메커니즘⁽³⁾

2.1. 生産要素의 投入, 生産性, 그리고 1人當 所得의 決定

한 나라 경제의 총량 규모를 요약해서 나타내는 척도는 GDP 또는 GNI이지만 그 구성원의 평균적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는 1人當 所得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인당 소득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아내고 아울러 1인당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이유로 또한 어떤 경로를 따라 변화해 나가는지 알아낸다면 經濟成長에 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 나라가 1년 동안에 창출한 所得의 합을 Y , 人口를 N , 그리고 勤勞者 數를 L 이라 할 때, 1인당 소득은 $y \equiv Y/N$ 로, 그리고 근로자 1인당 소득은 $y' \equiv Y/L$ 로 정의된다. N 가운데서 실제로 소득창출에 나서는 것은 L 이므로 소득 Y 결정에 영향을 주는 노동변수는 L 이다. $y = Y/N = (Y/L)(L/N)$ 관계가 성립함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 1인당 소득 Y/L 과 勞動參與率 L/N 의 곱으로 1인당 소득이 정해진다. 따라서 근로자 한 사람이 생산하는 국민소득이 클수록, 그리고 노동참여율이 높을수록 국민 1인당 소득도 커진다. 둘 중 노동참여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 쉽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1인당 소득의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노동참여율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근로자 1인당 소득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勤勞者 1人當 所得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 하나는 근로자 한 사람이 갖고 일하는 生産要素의 投入量이고 다른 하나는 生産性이다. 소득창출을 위해 투입되는 생산요소에는 원료와 자재, 자본재, 금융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등이 있다. 생산성은 다시 技術과 效率性으로 분해할 수 있다. 즉, 기술수준과 효율성의 크기에 따라 생산성의 크기가 정해진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근로자 1인당 소득은 그 나라가 근로자의 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료와 원자재, 자본재, 금융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을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가 하는 근로자 1인당 요소투입량과 그 나라가 활용하는 기술의 수준 그리고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원료와 원자재의 총량을 M , 자본재의 총량을 K , 금융자본의 양을 FK , 사회적 자본의 크기를 SK , 인적자본의 양을 H , 아이디어 및 기술의 수준을 A , 그리고 효율성의 척도를 e 로 표시하면 유효노동력 1인당 소득 \hat{y} 의 결정을 다음과 같은 식 (2.1)로 표현할 수

(3) 이 장의 논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Barro & Sala-i-Martin(2004), Jones(2002), Weil(2005) 등을 참조하라.

있다. (4)

$$(2.1) \quad \hat{y} \equiv \frac{Y}{AeL} = f(M/AeL, K/AeL, FK/AeL, H/AeL, SK)$$

식 (2.1)에서 원자재 M , 자본재 K , 금융자본 FK , 인적자본 H 는 각각의 총량을 유효 노동력의 크기 AeL 로 나눈 1인당 투입량을 변수로 썼음에 비해 社會資本 SK 은 그 자체를 변수로 쓴 것은, 후자는 非競合性 및 非排除性을 지녀 公共財이거나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이다. 만일 자본재 K , 금융자본 FK , 그리고 인적자본 H 에도 공공재적 요소가 있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1인당 투입량이 아닌 총 투입량을 변수로 써야 옳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특별히 언급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SK (그리고 추후에 보듯이 A 와 e)뿐이라고 가정한다.

식 (2.1)은 1인당 소득의 크기가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생산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투입한 생산요소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쓰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인 生産性은 技術水準 및 效率性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해진다. 따라서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 기술수준, 그리고 효율성의 정도 등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소득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식 (2.1)은 효율성의 척도 e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의 이론적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생산함수와 다르다. 이는 기술수준과 효율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성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식 (2.1)의 구체적 예로서 다음과 같은 生産函數가 자주 이용된다.

$$(2.2) \quad \hat{y} = \hat{m}^{\alpha_1} \hat{k}^{\alpha_2} \hat{fk}^{\alpha_3} \hat{h}^{\alpha_4} (SK)^{1-\alpha}$$

식 (2.2)에서 \hat{m} , \hat{k} , \hat{fk} , \hat{h} 의 측정 단위를 조정하면 한 경제가 보유한 유효노동력 1인당 자본재의 양을 \hat{k} 라는 하나의 인덱스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더해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SK = 1$ 인 수준에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식 (2.2)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2.3) \quad \hat{y} = \hat{k}^{\alpha} \Leftrightarrow y = Ae\hat{k}^{\alpha}$$

(4) 이하에서는 근로자 1인당 소득과 인구 1인당 소득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1인당 소득으로 쓰기로 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각 근로자가 더 많은 양의 생산요소를 갖고 생산과정에 임하거나 투입된 생산요소를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수록 근로자의 1인당 소득은 더 크게 정해진다. 즉, 투입하는 근로자 1인당 生産要素의 양이 많을수록, 技術水準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 경제의 效率性이 높을수록 1인당 소득이 크게 정해진다. 이렇게 보면 선진국에 속한 나라들은 투입하는 근로자 1인당 생산요소의 양이 아주 많거나, 기술이 아주 진보되어 있거나, 경제운영의 효율성이 아주 높아 그렇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후진국에 속한 나라들은 근로자 1인당 투입 생산요소의 양이 아주 적거나,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거나, 경제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진국은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은 적지 않지만 기술이 낙후되어 있거나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져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

生産要素의 投入量과 生産性을 구분해서 볼 때, 後進國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실제로 활용되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아주 적으며 동시에 생산성이 매우 낮다. 생산성은 아주 높는데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이 적어서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中進國의 경우에는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은 많은데 생산성은 별로 높지 않아 그렇게 된 경우가 대종을 이룬다. 그들 가운데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나라가 상위 중진국을 형성한다. 先進國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매우 높다. 흥미로운 것은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은 많아도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 생산성이 낮은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생산성은 아주 높는데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이 극히 적은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즉,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성이 높으면 활용하는 생산요소의 양도 많다.

이렇게 보면 후진국이 중진국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生産性 向上을 유지한 채 투입하는 生産要素의 量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후진국을 중진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끌어 올리는 일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후진국은 거의 예외 없이 그러한 여력이 없으므로 우선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 중진국 수준으로 소득을 높인 후에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실용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20여 개에 이르는 後進國들이 지난 50여 년에 걸쳐 한 치의 經濟發展도 이룩하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1인당 소득 500달러 내외의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1인당 소득을 결정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그렇게

극빈 상태를 탈피하지 못한 것은 要素投入量을 늘릴 수도 生産性を 향상시킬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누구나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대 왜 이들 나라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거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인센티브가 없었거나,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지만 남에게 그 과실을 빼앗겼거나, 조금 발전하다가가는 불행한 일을 당해 다시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대개의 경우 그런 극빈국의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는 사실이다.

2.2. 投資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일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일 모두 중요하지만 후자가 특히 더 중요하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일은 限界生産力 遞減의 法則을 따르지만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진국이 요소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감으로써 1인당 소득을 늘릴 수는 있지만 증가된 요소투입량에 비해 늘어난 소득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므로 요소투입량 증가만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일은 곧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면 요소투입량 증가가 갖는 한계생산력 체감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1인당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작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일은 매우 어려우므로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작업을 소홀히 하다가는 현 상황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동시에 요소투입량의 증가 속도를 중진국들의 평균치 정도로 유지한 나라만이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일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한 나라의 수에 비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하였거나 거의 다 성공한 나라의 수가 훨씬 더 많음을 보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일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일보다 쉬운 것이 분명하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유용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 되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려면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要素投入量을 늘려 나가는 일보다 生産性을 향상시키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우므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일이 더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후진국의 경우 생산성 향상의 속도는 아주 높지 않더라도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속도는 높게 유지할 수 있을 때 중진국으로 이행할 수 있음에 비해, 중진국의 경우에는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속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의 속도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限界生産力이 遞減하기 때문이다. 요소투입량의 증가를 통해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은 투입된 생산요소의 양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실제의 결과를 보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이르는 과정에서는 한계생산력 체감 현상이 그리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이르면 한계생산력이 비교적 급속도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통해 한계생산력이 급속도로 체감하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아야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거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만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經濟成長 또는 經濟發展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또는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 하위 후진국 즉, 최빈국의 위치에서 중위 후진국을 거쳐 상위 후진국으로 이행하는 일,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점프하는 일, 하위 중진국에서 중위 중진국을 거쳐 상위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점프하는 일, 하위 선진국에서 중위 선진국을 거쳐 상위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일은 모두 다 생산요소 투입량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또는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을 때는 상위 단계로의 이행에 있어 생산요소 투입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단계로 이행함에 있어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거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리는 일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저절로 되는 법이 없다.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갖고 그 나라가 지닌 총체적 역량의 보다 많은 부분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 쓰거나 쓰도록 유도할 때에야 가능한 일이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일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에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이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결국 投資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經濟發展은 불가능함이 자명해진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요소 투입량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동시에 투자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投資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에 지금보다 더 큰 所得을 창출하게 만드는 일 즉, 경제의 生産能力을 확충하는 일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더 많은 자원을 발견하거나 더 좋은 자원을 찾아내는 일에 자원을 사용함을 의미하며, 자본재의 양을 늘려 나가는 데에 자원을 사용함을 의미하며, 金融資本을 축적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에 자원을 사용함을 의미하며, 국민의 건강과 수명과 교육의 양과 질과 훈련의 양과 질 등 人的資本의 양을 늘리는 데에 자원을 사용함을 의미하며,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社會間接資本의 양을 늘리고 질을 개선하는 일과 이념과 제도와 기구와 정책 등 社會資本의 양을 늘리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자원을 사용함을 의미하며, 법질서를 유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슬기로운 외교활동을 통해 국익을 신장시키는 데에 자원을 사용함을 의미하며, 연구 인력의 양성, 연구개발의 촉진, 발견과 발명의 진흥, 기술도입 등을 통해 기술의 수준과 활용도를 높여가는 일에 자원을 사용함을 의미하며, 행정능률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대추구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 등을 통해 經濟의 效率性을 높이는 데에 자원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위에 열거한 행위들을 투자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위에 열거한 거의 모든 행위에 걸쳐 그것이 저절로 즉, 공짜로 되어지는 법은 결코 없다는 냉엄한 사실이다. 그에 합당한 자원을 투입할 때에 비로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投資를 위한 財源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거나, 외국에서 빌려오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외국에서 빌려오는 자원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므로, 外國人에 의한 直接投資를 예외로 하면, 투자재원의 궁극적인 원천은 자체조달 즉, 貯蓄에 있다. 그러므로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나, 미래에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외국에서 더 많이 빌려올 수 있거나, 더 많은 외국인이 국내경제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다.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일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일에 합당한 만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근로자 수의 증가, 감가상각, 그리고 기술진보 등에 의해 정해지는 최소한의 필요자본량보다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때에야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다. 이는 그 나라의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최소한의 필요자본량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자를 위해 동원할수록 그 나라 경제의 성장속도가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제 이 문제에 관하여 新古典學派 成長模型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運動方程式’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2.4) \quad \dot{k} = i \cdot f(k) - (n + \delta + x)k$$

이 식에서 \dot{k} 는 각종 자본재의 총량을 (근로자의 수) × (기술수준) × (효율성)으로 정의되는 有效勞動力(effective labor)으로 나눈 유효노동력 한 단위당 資本財의 量(capital per effective labor)을 나타낸다. 즉, $\dot{k} = K/(AeL)$ 이다. 마찬가지로 $f(k)$ 는 유효노동력 한 단위당 소득 즉, $Y/(AeL) \equiv \hat{y} = f(k)$ 에 해당한다. 한편 i 는 저축률 = 투자율, n 은 근로자 수 증가율, δ 는 감가상각률, 그리고 x 는 기술진보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여기에서 資本財 \dot{k} 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금융자본 등을 포괄한 廣義의 資本財를 나타낸다.

식 (2.4) 앞부분은 이 경제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자원의 양을 나타내고 뒷부분은 이 경제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원량을 나타낸다. 식에서 보듯이 어떤 경제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량보다 더 많은 양의 자원을 투자하면 1인당 資本財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인당 자본재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1인당 자본재의 양에 의해 1인당 소득이 정해지므로 최소한의 필요자본량보다 많이 투자하는 경제는 성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제는 퇴보하게 된다.

위 식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근로자 수 증가율 = $n = 0.015$, 감가상각률 = $d = 0.05$, 기술진보율 = $x = 0.02$, 그리고 자본-소득 계수는 3인 中進國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경우 최소한의 必要資本量은 현재 이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1인당 資本量의 8.5%로 정해진다. 이는, 자본 = 소득 계수가 3이므로, 이 경제가 최소한의 필요자본량을 충족하는 데만 1인당 소득의 25.5%에 해당하는 자원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만일 이 경제가 스스로의 저축을 통해서나, 외국에서 빌리거나,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해서 근로자 1인당 소득의 25.5%보다 더 많은 양의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성공하면 근로자 1인당 자본의 양을 늘려 나가는 일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에 자원을 나누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의 35%에 달하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 중 25.5%는 최소한의 필요자본량을 충당하는 데 쓰고 나머지 9.5%를 생산요소투입량을 늘려 나가는 일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투자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1인당 소득의 30%에 불과하다면 최소한의 필요자본량을 충당하고 남은 자

원의 양이 4.5%에 불과하므로 당연히도 처음 고려한 경우에 비해 경제성장의 속도가 떨어진다.

근로자 수 증가율 = 0.02, 감가상각률 = 0.05, 그리고 기술진보율 = 0, 그리고 자본-소득 계수가 1.5인 전형적인 後進國의 경우는 어떠한가? (후진국일수록 인구증가율이 높으며 기술진보율이 낮고 자본-소득 계수가 작다.) 이 경우 최소한의 필요자본량은 현재 이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의 7%가 된다. 이제 자본-소득 계수가 1.5이므로 이 경제가 최소한의 필요자본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1인당 소득의 10.5%에 해당하는 자원을 조달해야 한다. 전형적인 후진국의 경우 자체 貯蓄率이 매우 낮으며 外資導入 능력이 약하고 外國人 直接投資를 유치할 환경이 되지 않으므로 10.5% 정도의 자원을 동원하는 일도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후진국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를 통해 연명해 나가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에서이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후진국이 투자자원의 동원 비율을 10.5%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인구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면 그 나라는 투자를 늘려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증가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여 투자함으로써 소득을 더 증가시키는 善循環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경로로 들어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투자를 위한 재원의 조달 원천에는 자체 貯蓄과 해외에서의 援助와 해외에서의 借入과 外國人에 의한 國內投資 등이 있다. 이중 援助는 주로 하위 또는 중위 후진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나머지 세 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자체 貯蓄이 가장 중요한데 그 까닭은 많은 나라 특히 후진국의 경우에는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아 외자를 도입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자체 저축이 투자재원의 유일한 원천이 되므로 그렇다. 또 다른 까닭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도우려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행할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후진국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를 위한 재원조차 조달하지 못해 貧困의 惡循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생존에 급급해 저축할 여력이 없고 저축을 하지 못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점점 더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유엔, 세계은행, 몇몇 선진국 등이 그들에게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원조를 받은 나라 가운데 자생적인 발전의 경로로 들어서서 절대빈곤을 탈피한 경우는 많지 않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러한 후진국들에게는 경제발전의 희망이 없는 것일까?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후진국들이 갖고 있는 問題의 핵심은 그들이 자기 나라 경

제의 미래에 관해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과실을 부당하게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보장,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리라는 희망, 지금 굶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행하면 그 과실이 자기에게 돌아오리라는 전망, 내가 희생하면 후손은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경로로 들어설 수 있다. 외부 또는 내부의 적이 나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私有財産權의 인정과 보호, 經濟的 自由의 확보, 생산적인 정부, 정치체제의 안정성, 합리적인 게임의 규칙 확보와 그 준수,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질 때 경제주체들은 누구나 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게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한 활동에 자원을 사용하게 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후진국이 후진국인 상태로 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위에 열거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기에 경제주체들이 최선을 다해 생업에 종사할 유인을 갖지 못함은 물론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의 생존을 위해 노심초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전쟁과 창궐하는 질병과 기아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民主主義를 거부하는 압제자들에 의한 恐怖政治, 만연하는 부정부패, 유용한 정보의 차단을 통한 愚民統治 — 그러한 암울한 환경 아래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 더욱 문제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국내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외로 탈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본의 해외도피와 유능한 인재의 국외 탈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앞날은 더욱 더 암울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후진국이 암울한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 경제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혼돈상태에 빠져 있던 후진국이 어떠한 일이 계기가 되어 합리적인 법질서의 유지,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적 자유의 허용, 통치체제의 안정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改革과 開放'의 길로 들어서면 경제가 기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경제주체들이 신명이 나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생산활동이 활성화되어 雇傭과 所得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게 되므로 投資가 活性化되어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어 경제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새로이 합당한 여건이 조성되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그 결과 저축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經濟發展의 善循環 構造로 이행하게 되는데 그 영향이 내국인에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껏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밝은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에 임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그 나라에 대해 새로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국내에서 저축한 자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外國資本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外資를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외자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내자가 해야 할 역할을 보조하는 데 있지 외자가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스스로의 저축을 늘려 나감으로써 純債務國에서 純債權國家로 변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외자의 활용과 관련하여 金融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다.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자본자유화를 도모하다가 金融危機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자의 활용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개방은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외자를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남한은 중국이나 싱가포르와는 상이한 경로를 밟았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外國人 直接投資를 핵심 경로로 채택했음에 비해 남한은 外資 借入을 핵심 경로로 채택했다. 싱가포르는 지정학적 이유로 중개무역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했기에 초기부터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장려했고, 중국은 방대한 국내시장이 갖는 잠재력을 내세워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남한은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다는 불리한 입장과 열악한 국내시장 여건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오랜 동안 식민통치를 당한 경험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일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본능적인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남한은 부족한 투자의 재원을 외자 차입으로 보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초기부터 외자 차입이 용이했던 것은 아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公的 借入 그리고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의 보증 채무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게 되자 비로소 民間 商業 借款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의 재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投資의 優先順位를 정할 필요가 있다. 民間投資의 경우에는 투자자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투자의 규모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므로 정부가 특별히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각종 경제지표가 경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면 된다. 다만 정책 당국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투자의 기회비용인 利率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시장이 제

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개입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후진국의 경우 특히 중요한데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한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더라도 아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후진국일수록 정부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개입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 반해 불행하게도 후진국의 정부일수록 그런 일을 잘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커다란 딜레마이다.

公共投資의 경우에는 국민의 租稅負擔率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정부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투자활동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교통,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공교육, 보건 후생 등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으므로 엄정한 타당성 평가 작업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경제규모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社會的 人的資本에 대한 투자가 社會的 物的資本에 대한 투자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경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산력의 원천을 물적자본, 인적자본, 금융자본, 물적 사회자본, 인적 사회자본, 기술, 효율성 등으로 분류할 때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의 경험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아 초기 단계에서는 物的資本을 확충하는 데 치중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人的資本과 金融資本을 확충하는 단계로 이행한 후 技術開發의 단계를 거쳐 人的 社會資本 형성과 效率性 향상을 중시하는 단계로 이행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물적자본을 확충하는 데 치중한다고 해서 다른 요소들을 아주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각종 자본을 다시 하위, 중위, 상위 수준으로 나눈다면, 예를 들어, 물적자본이 중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하위 수준의 인적자본 및 하위 수준의 금융자본으로 만족하다가 물적자본 축적이 상위 수준으로 이행할 단계에 이르면 인적자본의 축적 수준도 중위를 거쳐 상위 수준으로 이행하게 되며, 하위 수준에 머물던 금융자본을 중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 진행된다(이 단계에 이르면 이 경제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인적자본이 중위 수준을 넘는 단계에서부터는 기술력도 하위 수준을 넘어 중위 수준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며, 인적자본이 상위 수준으로 접어들면 기술도 상위 수준을 향해 발돋움하게 된다. 이때 금융자본도 상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물적자본, 인적자본, 금융자본, 기술 등이 상위 수준에 접어드는 단계에 이르면 체제, 이념, 관행, 제도, 정책 등 인적 사회자본을 고도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로 수행하면 이 경제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그것이 사적인 것이건 사회적인 것이건) 물적자본을 확충하는 일이 가장 쉽고,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일이 그 다음으로 쉬우며, 금융자본을 확충하는 일이 그 다음이고,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그 다음이며, 인적 사회자본 축적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어렵다. 人的社會資本 축적과 效率性을 높이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것은 그 일에 明示的인 費用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인적 사회자본 축적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일 중에는 많은 액수의 명시적인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저항, 이제까지 해오던 일이 지닌 강한 관성,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두려움, 나가야 할 방향의 옳고 그름에 대한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얘기이다.

2.3. 均衡成長 經路

經濟發展의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 나라 경제의 均衡成長 經路(balance growth path)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먼저 식 (2.4)에서 유효노동력 1인당 (광의의) 자본축적량 \hat{k} 가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는 않는 상태 즉, 定常狀態(stationary state)의 \hat{k} 인 \hat{k}^* 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점에 착안하기로 하자. 단, 생산함수는 식 (2.3)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2.5) \quad \hat{k} = 0 \Leftrightarrow \hat{k}^* = \left(\frac{i}{n+x+\delta} \right)^{\frac{1}{1-\alpha}} \Leftrightarrow k^* = \left(\frac{i}{n+x+\delta} \right)^{\frac{1}{1-\alpha}} Ae$$

이제 나라와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 각국을 나타내는 인덱스 j 를 첨가하고, j 국이 실제로 활용하는 기술 및 j 국 경제의 효율성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알아낸 것과 선진국에서 이전받아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우월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위 식 (2.5)를 고쳐 쓰면 j 국의 1인당 소득 $y_j^*(t)$ 를 다음의 식 (2.6)⁽⁵⁾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quad y_j^*(t) = \left(\frac{i_j}{n_j+x_j+\delta_j} \right)^{\frac{\alpha_j}{1-\alpha_j}} \left(\frac{\mu_j}{x_j} e^{\psi_j u_j} \right)^{1/\gamma_j} \max[A_j(t)e_j, G(A^*(t)e^*)]$$

여기에서 $i_j, n_j, x_j, \delta_j, \mu_j, \psi_j, u_j, \gamma_j$, 그리고 α_j 는 각각 j 국가의 투자율, (근로자수) 증가율,

(5) 이 식은 Jones(2002) 129쪽 식 (6.8)을 조금 더 일반화한 것이다.

생산기술의 발전 속도, 감가상각률, 인적자본 생산함수의 기술지표, 인적자본 형성에서 교육 및 훈련활동의 공헌도를 나타내는 지표,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 인적자본 창출에서 현존 인적자본이 공헌하는 정도, 그리고 최종재 생산에 있어서 자본재의 생산성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끝으로 $A_j(t)$ 와 $A^*(t)$ 는 각각 j 국 및 최선진국의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식 (2.6)에서 보듯이 투자율이 높을수록, 인적자본 생산의 기술이 앞서 있을수록, 인적자본 형성에 투입하는 자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1인당 소득이 크게 정해진다.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식 (2.6)에서 보듯이, $i_j, n_j, x_j, \delta_j, \mu_j, \psi_j, u_j, \gamma_j$, 그리고 α_j 등의 파라미터 값은 균형경로상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균형경로상의 성장률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같게 정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파라미터 $i_j, n_j, x_j, \delta_j, \mu_j, \psi_j, u_j, \gamma_j$ 와 α_j 의 변화는水準效果(level effect)는 가지나 成長效果(growth effect)는 갖지 않는다.⁽⁶⁾

식 (2.6)에 들어 있는 $\left(\frac{\mu_j e^{\psi_j}}{x_j}\right)^{1/\gamma_j} \max[A_j(t)e_j, G(A^*(t)e^*)]$ 는 지금까지 j 국이 축적해온 기술이 A_j , j 국의 경제효율성이 e_j , 선진국에서 전수받아 쓸 수 있는 기술이 A^* , 선진국의 경제효율성이 e^* , 교육과 훈련 및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이 u_j ,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ψ_j , 그리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μ_j 로 주어졌을 때 j 국 경제의 생산성 수준을 나타낸다.

식 (2.6)은 균형성장 경로 위에서 정해지는 j 국의 1인당 소득을 나타내는 식인데 여기에 j 국가의 기술수준 $A_j(t)$ 뿐 아니라 최선진국의 기술수준 $A^*(t)$ 도 獨立變數로 들어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자국이 보유한 기술은 물론 타국이 보유한 기술도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식 (2.6)에서 $G(A^*(t))$ 는 최선진국의 기술 집합 가운데서 자국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집합을 나타낸다. 이 부분집합에는 $A^*(t)$ 가운데서 公共財의 특성을 지닌 기초기술과 지적재산권이 부여되어 있는 기술 가운데서 자국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직접투자를 통해 이전받을 수 있는 선진기술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식 (2.6)에서 $A_j(t)$ 와 $G(A^*(t))$ 가운데 더 큰 값을 택하는 것은, 자국이 보유한 기술과 최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 가운데서 우월한 것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점은 각국 경제의 효율성 e_j 및 e^*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일 최선진국의 기술 및 효율성이 모든 측면에서 자국의 기술 및 효율성보다 앞서 있을 뿐 아니라 후진국이 그것을 전수 받아 활용하는 데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면 식

(6) 물론 여기에 열거한 파라미터가 수준효과뿐 아니라 성장효과를 갖는 모형을 만들 수도 있다.

(2.6)에서 $G(A^*(t)e^*) = A^*(t)e^*$ 가 성립하고 $A^*(t)e^* > A_j(t)e_j$ 가 성립하므로 식 (2.6)의 맨 마지막 항은 그대로 $A^*(t)e^*$ 가 된다. 이것은 최선진국의 기술을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선진국이 보유한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선진국 경제의 효율성 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이 공지(public knowledge)일 때만 적용된다. 그러나 $A^*(t)e^*$ 가운데서 공지에 해당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그 중에서도 자국의 기술 및 효율성 $A_j(t)e_j$ 보다 우월하며 그것을 써서 얻는 혜택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쓸 것이므로, 후발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A^*(t)e^*$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선진기술 및 효율성을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활용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아이디어나 기술 및 효율성에 관한 노하우의 국가 간 이전을 막을 만큼 貿易障壁이 높으면 $G(A^*(t)e^*) = 0$ 이 되므로 식 (2.6)에는 $A_j(t)e_j$ 만 들어간다.

어떤 선진기술을 얼마나 널리 사용할 것인가는 그것을 사용해서 얻는 혜택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서 純限界便益(net marginal benefit)이 0이 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선진기술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는 기술을 사거나 빌리는 데 드는 비용 외에도 선진기술을 흡수해서 사용하는 능력인 기술수용능력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과학기술인재를 풍부하게 보유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더 쉽게 선진기술을 배워 쓸 수 있다. 한편 貿易自由化가 진전될수록 技術移轉이 촉진될 것이므로 經濟統合의 정도가 높을수록 기술이 수렴하는 속도도 빨라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 (2.6)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에 위첨자 *를 붙인 까닭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이것은 j 국의 경제가 균형성장 경로에 놓여 있을 때 각 변수가 취하는 값을 나타낸다. 均衡成長 經路라 함은 이념, 체제, 제도, 기구, 관행, 정책 등 경제활동의 외연적 기초 아래서 소비자, 근로자, 생산자, 투자자 등 경제의 각 주체들이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정해지는 투자율, 인구증가율, 교육 및 훈련의 총량, 교육 및 훈련의 질, 연구 및 개발의 총량, 연구 및 개발의 효율성 등 경제활동의 내부적 기초가 그 장기적 최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정해지는 성장의 경로를 의미한다. 이것은 경제의 기초가 안정되어 있을 때 정해지는 長期的 成長 經路이므로 실제의 성장 경로가 균형성장 경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의 성장 경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균형성장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인해 균형성장 경로에서 이탈한 후 아직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든지, 균형성장 경로 자체가 달라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균형성장 경로에서 벗어난 후 새 균형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성장 경로는 균형성장 경로와 달라진다.

실제의 1인당 소득 $y_j(t)$ 는 경제가 균형성장 경로상에 있을 때는 식 (2.6)이 가리키는 바

와 같이 정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의 장기적 속성으로서 그러할 뿐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實際所得 $y_j(t)$ 가 均齊所得 $y_j^*(t)$ 와 달라질 수 있다. $y_j^*(t)$ 는 식 (2.6)에 포함되어 있는 각 파라미터 및 선진기술의 활용도가 일정한 값에 고정되어 있을 때 정해지는 성장 경로 즉, 경제의 기초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해지는 장기적 성장 경로상에서의 1인당 소득을 나타낸다. 반면 $y_j(t)$ 는 식 (2.6)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나 선진국의 기술 및 효율성을 활용하는 정도가 그 경제의 기초를 규정하는 값에서 이탈했을 때 정해지는 성장 경로상의 1인당 소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경제의 기초가 저축률(투자율) 30%, 인구증가율 1%, 감가상각률 5%, 일생 동안 교육 및 훈련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 25%, 그리고 선진기술 활용도 40%로 주어진 어떤 경제가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5%로 정해지는 均衡成長 經路를 따른다 하자. 이것은 저축률(투자율), 인구증가율, 감가상각률, 교육 및 훈련 시간의 비중, 선진기술 활용도(그리고 각종 생산성 파라미터) 등이 매년 위에서 가정한 값으로 유지될 때 정해지는 성장 경로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주어진 값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경제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값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그리로 다시 돌아감을 의미한다. 이처럼 투자율, 인구증가율, 감가상각률, 교육 및 훈련 시간의 비중, 선진기술 활용도 등이 이 경제의 기초를 규정하는 값에서 이탈했을 때 정해지는 것이 실제 성장 경로이다. 다른 수치는 그대로인데 투자율이 25%로 하락했을 때 1인당 소득 증가율이 3%로 정해지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된다.

2.4. 均衡成長 經路의 特徵

우리는 지금까지 한 나라 경제의 均衡成長 經路는 이념, 체제, 제도, 기구, 규범, 정책 등 外延的 要素와 투자율, 인구증가율, 교육열, 노동의 질, 금융의 효율성, 연구개발 투자율,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 등의 內包的 要素로 이루어진 경제의 '基礎'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과 (일시적으로) '實際'가 기초에서 이탈할 때 정해지는 것이 實際 成長 經路임을 알아보았다. 이제 이 논의를 경제발전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이 글의 도입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계의 각국을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의 세 부류로 구분하기로 하자. 금세기 초반의 실제 통계로 보면, 1인당 소득이 25,000달러 이상 되는 나라를 선진국,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 내외인 나라를 중진국, 그리고 1인당 소득이 2,000달러 이하인 나라를 후진국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조악한 구분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떠한 요소들이 한 나라를 선진국, 중진국, 또는 후진국에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한 나라의 '經濟的 基礎(economic fundamentals)'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답은 '경제적 기초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 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선진국으로서의 특성에 부합한 경제적 기초를 지니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후진국으로서의 특성에 부합한 경제적 기초를 지니고 있는 나라는 후진국이 된다 할 수 있다. 물론 중진국으로서의 특성에 부합한 경제적 기초를 지니고 있는 나라는 중진국이 된다.

경제적 기초를 E^* 로 표시하기로 하자. 이 경우 우리는 최소한 세 종류의 경제적 기초를 생각할 수 있는데, E^* (선진국), E^* (중진국), 그리고 E^* (후진국)이 그것이다. 균형성장 경로상의 1인당 소득이 경제적 기초에 의해서 정해지며, 실제의 1인당 소득은 균형성장 경로상의 1인당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진다는 것은 $y(t)$, $y^*(t)$, 그리고 E^*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2.7) \quad y(t) = y^*(t) + \varepsilon_t = H(E^* + z_t) + \varepsilon_t$$

여기에서 z_t 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기초에 대해 일시적이거나 변화를 초래하는 제반 요소들을 나타내며 ε_t 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확률적인 교란요인을 나타낸다.

식 (2.7)은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의 1인당 소득이 다음과 같이 정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2.8) \quad \begin{aligned} y(t : u) &= y^*(t : u) + \varepsilon_t = H(E^*(u) + z_t) + \varepsilon_t \\ y(t : m) &= y^*(t : m) + \varepsilon_t = H(E^*(m) + z_t) + \varepsilon_t \\ y(t : a) &= y^*(t : a) + \varepsilon_t = H(E^*(a) + z_t) + \varepsilon_t \end{aligned}$$

여기에서 u, m, a 는 각기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이제 z_t 와 ε_t 가 중립적인 값을 지니고 있을 때 중진국으로서의 경제적 기초를 지닌 나라의 균형성장 경로가 1인당 소득 15,000달러 그리고 그 증가율 4%로 정해진다고 하자. 이 경우 어떤 나라의 실제 1인당 소득이 18,000달러이고 그 증가율이 4.5%라면, 이 나라는 중진국으로서의 경제적 기초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z_t 그리고/또는 ε_t 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실제의 경제성고가 중진국의 평균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것이 z_t 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 이 나라는 1인당 소득 18,000달러에서 시작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4.5%의 속도로 성장하겠지만, 만일 그것이 ε_t 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이 나라의 1인당 소득은 조만간 15,000달러로 회귀할 것이며 그 증가율도 4%로 낮아질 것이다. 중진국이지만 실제 소득이, 예를 들어, 10,000달러인 나라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 (2.7)에서 所得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要素인 E^* , z_t 및 ε_t 는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통해 얼마나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있어서 상이하다. ε_t 는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확률적 요인들을 나타내며, z_t 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나타내고, E^* 는 여간해서는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을 나타낸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z_t 의 변화가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진국의 경제적 기초를 규정하는 투자율이 30%라 할 때, 어떤 나라는 z_t 가 마이너스 값을 지녀 실제 투자율이 25%가 되고 다른 나라는 z_t 가 플러스 값을 지녀 실제 투자율이 35%가 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중진국의 균형 성장률 5%보다 낮은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5%보다 높은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예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투자율이 다시 30%로 돌아감을 전제로 한다. 반면 어떤 나라의 투자율이 항구적으로 높아져 35%가 된다면, (동시에 경제적 기초를 규정하는 다른 요소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이때는 z_t 가 아니라 E^* 의 값이 전보다 커진다. 그 결과 새로운 E^* 가 先進國의 經濟的 基礎인 E^* (선진국)에 근접해진다면, 이 나라는 중진국인 현 위치를 벗어나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

3. 經濟成長의 多樣한 樣相

經濟發展의 정도에 따라 선진국, 중진국, 그리고 후진국으로 삼분했던 국가별 분류를 下位, 中位 및 上位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아홉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소득이 500달러 이하인 나라를 하위 후진국, 1인당 소득이 1,000달러 내외인 나라를 중위 후진국, 그리고 1인당 소득이 2,000달러 정도인 나라를 상위 후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後進國의 다수는 1인당 소득이 500달러 내외인 하위 후진국이라는 사실이다.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1인당 소득이 5,000달러 내외인 나라를 하위 중진국, 15,000달러 내외인 나라를 중위 중진국, 그리고 20,000달러 내외인 나라를 상위 중진국으로 나눌 수 있다. 中進國의 경우에는 이 그룹에 속하는 나라의 1인당 소득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先進國의 경우에도, 30,000달러 내외인 나라를 하위 선진국, 35,000달러 내외인 나라를 중위 선진국, 그리고 40,000달러 이상인 나라를 상위 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선진국 간에는 국가 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1. 그룹 내 또는 그룹 간 이동

지난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國家別 經濟發展의 다양한 경험을 위의 논의에 비추어 이해해 보기로 하자.

먼저 後進國의 경우를 보자. 50년 전에 1인당 소득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서) 500달러 내외로 아주 가난했던 나라들이 그 동안 걸어온 경로로서 (가) 경제성장에 실패하여 현재의 소득이 500달러가 되지 않는 경우, (나) 예나 지금이나 500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는 경우, (다)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1인당 소득이 1,000달러가 넘는 경우, (라)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中進國으로 탈바꿈한 경우, 그리고 (마)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先進國으로 移行하는 데까지 성공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가)는 후진국으로서의 경제적 기초가 제공하는 생산능력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경제발전에 실패한 경우이고, (나)는 후진국으로서의 경제적 기초가 제공하는 생산능력을 활용하는 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경우이며, (다)는 후진국으로서의 경제적 기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데 성공했으나 후진국의 경제적 기초를 중진국의 그것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미치지 못한 경우이고, (라)는 후진국의 경제적 기초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그것을 중진국의 경제적 기초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한 경우이고, (마)는 후진국의 경제적 기초를 중진국의 경제적 기초로 탈바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그것을 선진국의 경제적 기초로 변모시키는 데까지 성공한 경우이다.

당초 후진국이었던 나라를 놓고 보면 이 기간 중 1인당 소득이 정체되어 있었거나 약간 감소하여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나라가 60%, (다)에 해당하는 나라가 30%, 그리고 (라)에 해당하는 나라가 10%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마)에 해당하는 나라로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이러한 사실은 후진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앞에서 언급한 E^* 는 물론이거니와 z_t 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조차 해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z_t 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E^* 를 업그레이드하는 변화를 이룩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z_t 를 플러스 값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기에 中位 또는 上位 後進國으로 이동해 가게 된 것이다. (라)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z_t 를 플러스 값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음은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E^* (후진국)을 E^* (중진국)으로 만드는 일에도 성공했기에 後進國에서 中進國으로 옮겨가는 그룹 간 이동에 성공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에 해당하는 나라 즉, 싱가포르는 E^* (후진국)을 E^* (중진국)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시 E^* (선진국)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업적을 이룩함으로써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先進國으로

이행한 것이다.

다음 中進國의 경우를 보자. 당초 중진국이었던 나라가 변화해 온 경로로는 (가) 중진국이었던가 후진국으로 퇴보한 경우, (나) 중진국에 그대로 머문 경우, (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우 등이 있다. (나)의 경우는 다시 하위 중진국에서 중위 중진국 또는 상위 중진국으로 이동해 간 경우, 중위 중진국에서 하위 중진국으로 퇴보했거나 상위 중진국으로 발전한 경우, 상위 중진국에서 중위 중진국 또는 하위 중진국으로 퇴보한 경우, 그리고 처음의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하위 중진국에서 중위 중진국으로 이행한 나라는 계속해서 상위 중진국으로 이행해 갈 가능성이 높고, 하위 중진국에서 중위 중진국을 거쳐 상위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발전을 거듭해서 선진국으로 이행해 갈 가능성을 갖는다. 반면 상위 중진국에서 중위 중진국으로 퇴보하였거나 중위 중진국에서 하위 중진국으로 퇴보한 경우에는 자칫하다가는 그 아래 단계로 퇴보할 가능성을 지니며, 특히 상위 중진국에서 하위 중진국에 이르기까지 두 단계나 퇴보한 경우에는 추락을 멈추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0년 동안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옮겨 온 나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 간 나라, 그리고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진 나라가 있었기에 구성원의 정체성으로 보면 중진국 집단이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중진국의 경우에도 모든 나라가 E^* (중진국)으로 대표되는 經濟的 基礎를 지닌 가운데, z_t 를 플러스,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유지했는가에 따라 각각 上位, 中位, 그리고 下位 中進國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z_t 를 마이너스에서 제로, 또는 제로에서 플러스 바꾸는 데 성공한 나라는 각각 하위 중진국에서 중위 중진국으로, 또는 중위 중진국에서 상위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 이 기간 중 z_t 를 플러스에서 제로, 또는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만드는 '실수'를 저지른 나라는 상위 중진국에서 중위 중진국으로, 또는 중위 중진국에서 하위 중진국으로 퇴보하였다. 특기할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이 기간 중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중진국으로 이행한 후에도 발전을 거듭하여 선진국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先進國의 경우에도 (가) 하위 선진국에서 중위 선진국 또는 중위 선진국에서 상위 선진국으로 상향이동한 나라, (나) 상위 선진국에서 중위 선진국 또는 중위 선진국에서 하위 선진국으로 하향이동한 나라, 그리고 (다) 자기의 위치에 그대로 머문 나라 등이 있다. 선진국의 구성원은 다른 부류에 비해 매우 安定的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경우 주된 변화는 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 기간 중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탈락한 나라는 없다.⁽⁷⁾ 선진국에 속한 나라들이 갖는 중

요한 특징의 하나는 당초에는 구성원의 경제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 차이가 아주 좁혀졌다는 사실이다.

3.2. 主要 地域別 經濟成長 樣相

이제 주요국의 경제성장 경험에 앞의 논의를 적용해 보자.⁽⁸⁾

3.2.1. 東아시아

먼저 日本을 보면, 일본은 19세기 중엽에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이후 서방국가를 따라잡자는 구호 아래 經濟的 基礎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결과 당초 下位 後進國이던 나라를 1940년까지 약 70년 만에 先進國으로 변모시키는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제2차 대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과도한 군비지출로 인한 국력소진, 전쟁으로 인명손실, 그리고 폭격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파괴로 인해 경제력이 하위 중진국 수준까지 퇴보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약 20년에 걸쳐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함으로써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선진국으로 되돌아가는 데 성공하였다. 선진국이 된 이후에도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20년에 가까운 장기 불황을 경험하였음에도, 오늘날 일본은 명실 공히 上位 先進國에 속한다. 장기불황을 경험하면서 경제의 기초를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한 일본은 앞으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여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南韓이나 臺灣은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이 기간 중 중진국 대열에 합류한 이래 현재는 中位 혹은 上位 中進國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남한이나 대만보다 약 10년 늦게 하위 후진국에서 시작하여 경제발전을 거듭한 결과 하위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한 경우이다. 인도네시아는 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하위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듯하다 다시 퇴보한 경우이며, 필리핀은 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상위 후진국 단계로 이행하는 데 그친 경위다. 中國은 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한지 30여 년 만에 이제 상위 후진국을 벗어나 하위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한 경우이다. 예상되는 중국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중국은 멀지 않은 장래에 중위 중진국으로 이행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인도는 중위 후진국에서 상위 후진국 단계를 거쳐 하위 중진국 단계로 이행 중인 나라이다. 베트남은 중위 후진국에서 하위 후진국으로 퇴보했다가 지금은 중위 후진국 수준을 회복한 후 상위 후진국을 향해 이행 중인 나라이다.

(7) 구소련이나 동독이 선진국이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두 나라가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퇴보한 예가 될 것이다.

(8) 논의의 배경이 된 자료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Report*(각년) 및 World Bank의 관련 web site인 <http://econ.worldbank.or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북한, 몽골 등은 하위 후진국에서 중위 후진국 단계로 이행한 나라들이다. 끝으로 싱가포르는 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중간의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지금은 하위 선진국으로 이행한 나라로서 지난 50년 동안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예이다. 홍콩은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상위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 진입 직전까지 갔으나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 아직 상위 중진국 단계에 머물고 있는 예가 된다.

3.2.2. 유럽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上位 中進國 수준에서 先進國 진입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이 가운데 특기할 것은 핀란드와 아일랜드이다.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經濟改革에 성공한 이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지금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앞서 가는 나라가 되었다. 서유럽 국가 가운데 포르투갈만이 아직도 상위 중진국에서 하위 선진국으로 이행 중이다. 독일은 이 기간 중 하위 선진국에서 상위 선진국으로 이행하였다가 동서독 통일 이후 중위 선진국으로 퇴보했으나 지금은 다시금 상위 선진국을 향해 이동 중이다. 그리스와 터키는 아직 상위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한 때 하위 선진국 대열에 끼일 정도로 발전했으나 공산권에 편입된 이래 퇴보를 거듭해 하위 중진국 수준으로 내려앉았다가 구소련 몰락 이후 지금은 中位 中進國 또는 上位 中進國을 향해 이행 중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여전히 下位 中進國에 머물러 있다. 동구권 국가 가운데서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는 공산화의 악몽을 비교적 빨리 벗어나 중위 중진국 또는 상위 중진국을 향해 이동 중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선진국의 지위를 누렸으나 共產圈 붕괴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다가 지금은 下位 中進國 수준에 놓여 있다. 러시아를 예외 썬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구소련 위성국가들은 모두 下位 後進國 수준에 놓여 있다. 유럽 국가 가운데 발칸 반도의 여러 나라들은 유고슬라비아로 통합되어 있을 때 일시적이거나 중진국 위치에 있는 듯 했으나 구소련 붕괴 이후 내전을 거듭하다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으로 분할된 이래 지금은 下位 後進國으로 전락하였다.

3.2.3. 中東, 아프리카 및 南太平洋

중동이나 서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몇몇 산유국을 예외로 하면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의 예에서 보듯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後進

國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란은 한 때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는 듯 했으나 지금은 중위 후진국 수준으로 퇴보한 상태에서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등은 원유 수입으로 상위 중진국 또는 하위 선진국의 삶을 영위하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르렀다가 반복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지금은 중진국으로 퇴보한 경우이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지중해 연안의 알제리와 모로코와 튀니지를 예외로 하면 거의 모두가 下位 後進國으로서 반복되는 빈곤과 기아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예외라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정도이다. 후자는 금과 다이아몬드 생산을 통해 중진국으로 발전한 경우이고, 전자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중위 중진국 수준에 있던 나라가 장기간에 걸친 흑백분리 통치와 그로 인한 경제체제로 인해 上位 後進國 수준으로 후퇴하였다가 지금은 다시 下位 中進國으로 복귀한 경우이다. 이집트 역시 여타의 아프리카 국가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아직은 중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들인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우간다, 차드, 케냐, 레소토, 잠비아, 모잠비크, 가나,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수단, 콩고 등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하위 후진국에 속한다.

남태평양 국가 가운데서는 뉴질랜드와 호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밖의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피지, 뉴기니, 타이티 등은 아직도 하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3.2.4. 아메리카 大陸

北아메리카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는 상위 선진국이고 멕시코는 오랜 기간 동안 후진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근래에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한 경우이다. 北美自由貿易協定 체결 이후 멕시코의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져 앞으로 15년 이내에 선진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미국의 그것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는 독자적인 경제 기초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캐나다의 1인당 소득이 과거 몇 십 년 동안 미국의 1인당 소득의 90% 내외로 정해진 것은 아마도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中南美 國家 중에서는 칠레가 후진국에서 중위 중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예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니카라과, 에콰도르,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쿠바, 혼드라스, 파나마 등은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위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경우

가 태반이고 소수만이 상위 후진국 또는 하위 중진국에 속한다. 이 가운데 브라질은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적인 경제 기초를 제때에 중진국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데 실패한 결과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경우이고,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 하위 선진국 대열에 들 정도로 앞서 있던 나라를 하위 중진국 수준으로 퇴보시킨 경우이다. 최근 볼리비아와 콜롬비아 등이 社會主義를 기치로 내세워 주요 산업을 國有化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주변 국가로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최선진국인 미국과 인접해 있으며 최소한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쿠바가 지난 50여 년간 카스트르 치하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고집해 온 결과 중남미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3.3. 그룹 內 移動 및 그룹 間 移動의 代表的인 例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해서 지난 50여 년에 걸친 전 세계 主要 國家의 經濟成長, 실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3.1. 先進國 內에서 또는 先進國으로 上向移動한 境遇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서유럽 및 북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선진국들의 절대 다수는 5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으며 현재도 선진국이다. 즉, 현재 선진국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의 다수는 50여 년 전에 벌써 선진국으로서의 經濟的 基礎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 초기에 지녔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오면서 동시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왔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던 하위 선진국 또는 중위 선진국은 최선진국과의 技術隔差를 빠른 속도로 줄이는 데 성공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상위 선진국으로 변모되었다. 즉, 당초 선진국이었던 나라들 사이에서 所得收斂 현상이 일어났다.

현재의 선진국 가운데 특이한 변화를 보인 나라에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등이 있다. 일본은 일시적으로 중진국 수준으로 퇴보했으나 곧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선진국으로 회귀한 후 발전을 거듭해서 상위 선진국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당초 하위 후진국에 불과했으나 경이로운 발전을 지속해서 지금은 하위 선진국이 된 아주 특이한 경우이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및 핀란드는 당초 하위 또는 중위 중진국 수준에 있었으나 지난 20년 사이에 經濟改革에 성공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였다.

3.3.2. 後進國에서 中進國으로 上向移動한 境遇

남한과 대만과 타이와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그리스와 터키와 포르투갈, 폴란드와 체코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발틱 3국, 슬로베니아, 러시아, 멕시코와 칠레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중진국을 구성한다. 이들 가운데 남한, 대만, 타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은 後進國에서 中進國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경우이다. 그 중에서도 남한과 대만이 이룩한 성과는 종종 ‘奇蹟的’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스, 터키, 아르헨티나 등은 상위 후진국 또는 하위 중진국에서 중위 또는 상위 중진국으로 이행한 나라들이다. 즉, 경제발전의 성과가 그렇게 현저하지는 않은 나라이다.

동구 및 북구의 舊共產圈 國家들은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기 전에는 상위 후진국 또는 하위 중진국 수준에 있었으나 공산화 이후 중위 또는 상위 후진국 수준까지 퇴보하였다가 구소련 붕괴 이후 성장능력을 재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하위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의 자칭 先進國에서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하위 중진국 수준으로 퇴보하였다가 최근 몇 년에 걸쳐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下位 中進國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진국 가운데서 앞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남한, 대만, 멕시코, 칠레 등이다. 초기 EU 회원국인 그리스와 최근에 새로 회원이 된 동구 및 북구의 중진국들도 이미 선진국이 된 초기의 EU 회원국들과 동화되는 所得收斂 현상을 통해 先進國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타이, 말레이시아, 터키,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으로 변신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선진국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나 중동지역의 宗教와 人種紛爭이 종식되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3.3.3. 後進國 가운데 力動性을 보이는 境遇

앞에서 열거한 나라들 외에 약 130개에 이르는 후진국 가운데서 발전의 전망이 가장 밝은 나라의 예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몽골을 들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경제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등도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나라들이 특징은 온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開放型 市場競爭 시스템의 의거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데 있다.

中國은 세계사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와 문명을 이룩한 최선진국이었으나 근대 이후 産業化에 뒤짐으로써 淸朝가 열강 세력에 의해 붕괴된 이후 오랜 좌우 투쟁의 기간을 거치

면서 극도로 피폐해진 경제가 모택동의 閉鎖的 社會主義 통치 아래서 급격하게 쇠퇴함으로써 하위 후진국으로 전락한 바 있다. 그렇지만 모택동 사망 이후 덩소평이 집권하면서 그때까지 중국을 지배해 오던 폐쇄적 사회주의 노선을 開放的 市場主義 노선으로 180도 전환한 이후 약 4반세기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그에 힘입어 수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절대빈곤을 벗어난 것은 아마도 20세기 후반부에 인류가 성취한 최대의 업적일 것이다. 수많은 회의론자의 비판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고도의 經濟成長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가 쉽게 반전되지도 않을 전망이다. 그러기에 중국이 현재의 후진국 가운데서 중진국의 단계를 거쳐 선진국으로까지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印度 역시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이후 閉鎖的 社會主義 노선을 걸어오며 따라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져 한 때는 선두 후진국 정도였던 나라가 하위 후진국으로 퇴보한 바 있다.⁽⁹⁾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희망을 상실한 고급두뇌가 대거 서방 세계로 탈출함에 따라 인도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던 인도가 십여 년 전부터 개혁과 개방을 통해 開放型 市場競爭體制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근년에 들어와서는 대단히 눈부신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아직은 몇몇 지역 그리고 몇몇 산업에 한정된 현상이지만 개방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의 과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인도는 앞으로 더욱 빠른 경제발전의 길로 들어설 전망이다.

베트남은 한 때 인도차이나 반도의 맹주로서 상위 후진국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발전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각각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를 기치로 내세워 피나는 투쟁을 거듭하다가 월맹이 승리하면서 전국이 공산화되었고 그 결과 매우 빠른 속도로 하위 후진국 경제로 후퇴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통일 이후 약 10년에 걸쳐 민족의 통합을 기치로 내세우며 공산주의를 기초로 한 民族主義 노선을 견지하였다. 그 결과 경제는 더욱 피폐해졌다. 어느 정도의 민족통합에 성공한 베트남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국근대화를 목표로 개혁과 개방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즉, 공산주의에 바탕을 둔 閉鎖的 民族主義 노선에서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開放型 市場主義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러한 방향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베트남 국민들의 자질을 고려할 때 베트남 정부가 개혁과 개방 노

(9) 인도는 식민통치시기에 확립되었던 영국식 제도와 기구를 유지하였기에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평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개방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작업을 더 본격적으로 완수하면 베트남이 가까운 시일 안에 상위 중진국 단계를 거쳐 하위 선진국으로 이행해 갈 개연성이 아주 높다.

나머지 나라 가운데 몽골은 앞선 시기의 중국 그리고 지금의 베트남이 이루었던 것과 같은 改革과 開放으로의 노선변경을 통해 그들이 걸었던 발전의 경로를 따르고자 애쓰고 있다.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그리 크지 않지만 몽골정부가 개방과 개혁의 노선을 더욱 공고히 한다면 몽골이 가시적인 시일 내에 상위 후진국 수준에 이르는 발전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매우 빈한한 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하위 중진국 수준에 도달할 만큼 눈부신 발전의 성과를 거두어 타이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의 經濟危機를 맞아 다시금 후진국 수준으로 퇴보한 바 있으며 지금은 한편에서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4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獨裁體制를 民主體制로 전환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여전히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후퇴를 멈추고 점차 상황이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도네시아는 가까운 장래에 다시금 하위 중진국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3.3.4. 東아시아 國家가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이룩한 秘訣은?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약 250년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결과 일찌감치 선진국이 된 바 있는 서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의 주민을 이주시켜 건설했던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서방 국가와 인접한 몇몇 나라 그리고 소수의 산유국을 제외하면, 지난 50년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의 절대 다수가 東아시아 國家들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무슨 까닭에서 다른 지역 즉,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국가의 절대 다수는 경제발전에 실패하였는데 유독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남한, 타이,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등은 經濟發展에 성공하였는가?

이 글에서 제시한 이해의 틀을 원용하자면 위의 물음에 대한 일차적인 답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기 국가들은 均衡成長 經路를 정하는 $i_j, n_j, x_j, \delta_j, \mu_j, \psi_j, u_j, \gamma_j$, 그리고 α_j 등의 선택변수들을 후진국적인 것에서 중진국적인 것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진국적인 것에서 선진국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성공함과 아울러 자체 技術水準 $A_j^*(t)$ 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거나 최선진국의 앞선 기술 $A^*(t)$ 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답이다. 이 답의 근거로는 식 (2.6)을 보라. 다른 하나

는, 상가국가들은 經濟的 基礎 E^* 를 업그레이드하는 지난한 작업 즉, E^* (후진국)을 E^* (중진국) 내지는 E^* (선진국)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답이다. 이 답의 근거로는 식 (2.8)을 보라.

위의 답은 오직 일차적일 뿐이다. 그러한 답이 제시되면 곧 이어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를 그런 일을 해내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싱가포르, 남한, 중국, ... 등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그 나라 경제의 기초를 항구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한 반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다음 단계의 더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왜 그럴까?

어떤 나라는 경제발전에 성공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면, 경제발전에 성공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그 나라의 經濟主體가 無知하다. 둘째, 經濟主體들이 알고는 있지만 無能하다. 셋째, 알고 있으며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할 인센티브가 없다.

세 가지 까닭 가운데 무지와 무능 때문에 발전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식을 연마하고 경험을 쌓으며 노하우를 전수 받음으로써 무지를 해소하고, 인적 능력과 물적 능력을 배양하면서 동시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빌려서라도 능력을 키움으로써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들기 보다는 하기 쉬운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하위 후진국에 속한 나라라도 발전을 거듭해서 중위 후진국을 거쳐 상위 후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일단 상위 후진국 수준에 이르는 데 성공하면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발전 경로를 택하지 않는 경우는 일견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다. 경제주체들이 경제발전의 길로 들어설 인센티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지리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천시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열심이 노력해서 얻을 과실을 자기가 향유하게 될 전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발전의 길로 나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을 고치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이념이나 사상 또는 가치관을 발전지향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그러한 이념이나 가치관을 낳은 근본 요인인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발전 친화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社會主

義나 共產主義 體制를 資本主義 體制로 변화시켜야 하며, 閉鎖的인 세계관을 開放的인 것으로 바뀌어야 하고, 기후 등 자연조건의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전쟁과 약탈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政治的인 安定을 이루어 경제주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정부가 그 책무와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정책을 펴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한편 市場의 不完全性을 시정하는 것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종교, 문화, 역사, 기후, 민족성 등이 경제발전의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향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념과 가치관, 정치적 안정성, 안보와 평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경제발전의 경로나 속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 바꾸어 말하자면, 종교, 문화, 역사, 기후, 민족성 등은 經濟의 基礎 E^* 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못되지만 이념, 가치관, 정치적 안정성, 안보와 평화, 발전 친화적인 정책 등은 경제의 기초 E^* 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을 發展 親和的인 것으로 바꾸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既得權者'들이 (그들에게 귀속되는 몫을 기준으로 할 때) 변화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자의 힘이 클수록 改革이 힘든 것은 그런 까닭에서이다.

위에서 既得權者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후진국일수록) 중요한 것은 변화를 가져오게 할 힘을 지닌 最高 權力者의 태도이다. 최고 권력자가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지니고 일관된 개혁과 개방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온 나라는 모두 경제발전에 성공하였다. 반면 최고 권력자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한 나머지 경제발전을 소홀히 여긴 나라치고 발전에 성공한 예가 없다. 최고 지도자 또는 기득권층이 무지하거나 反발전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을 축출하거나, 매수하거나, 변화를 수용하게 만듦으로써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인센티브 구조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를 수용하게 만들려면, 대항세력의 힘을 길러 그들에게 맞서거나, 市場의 힘을 길러 그들을 억제하거나, 世界化의 힘을 빌려 그들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거나, 發展 親和的인 사상과 이념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經濟發展

4.1. 過去

이상의 논의가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물음은 우리나라 經濟史의 시점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가 식민통치를 벗어난 것이 1945년이므로 그때부터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므로 그때부터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경제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문헌과 자료가 많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한 분석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시기를 늦추어 1950년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이 종료된 1953년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자 우리나라의 巨視經濟統計가 작성되기 시작한 해인 1954년부터 살펴보자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1950년대는 전후복구의 시기였고 아직은 국가의 틀을 갖추는 단계여서 경제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발전의 길로 접어든 1962년부터의 역사를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여기에서는 1962년을 시발점으로 본다.

1962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전형적인 下位 後進國의 그것이었다. 1인당 소득은 (2000년도 가치로 환산해서) 400달러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으며, 농업어업 등 1차 산업이 비중이 65%에 이르렀고, 노동인구 네 명 당 한 명이 실업자였으며, 수출과 수입은 극히 미미했고, 평균 교육 연한이 5년 정도에 불과했으며 무엇보다도 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참담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개혁과 개방을 수단으로 삼아 경제발전이 매진해 온 결과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경제의 면모가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졌다.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를 넘어섰으며, 製造業이 산업의 핵심이 되었고,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國際貿易의 챔피언이 되었으며, 평균 교육 연한이 10년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실업률이 3% 이하로 낮아졌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는 전형적인 中位 中進國의 모습에 해당한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극심한 經濟危機를 겪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 2005년에 이르러서는 1인당 소득이 16,00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중위 중진국에 도달한 이후 현재는 상위 중진국으로 이행 중이다.

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44년 만에 상위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연평균 8.5%에 이르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했기에 가능했던 일

이다.⁽¹⁰⁾ 한 나라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는 예는 흔치않다. 지난 50여 년을 두고 보면 오직 몇 개의 국가만 이처럼 빠른 經濟成長을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 기간 중 달성한 발전의 성과는 오직 몇 나라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로 대단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후진국의 경제기초 E^* (후진국)을 중진국의 경제기초 E^* (중진국)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것은 또한 투자를, 근로시간과 근로효율,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를,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 금융의 효율성, 사회자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그 효율성, 기술개발과 기술흡수, 이념과 체제와 제도의 정비, 효과적인 정책 집행 등 生産要素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일과 技術 및 效率性에 의해 정해지는 生産性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가능했다.

4.2. 現在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러한 經濟發展의 대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후진국의 경제기초 E^* (후진국)을 중진국의 경제기초 E^* (중진국)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하위 후진국에서 중위 중진국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듯이, 이번에는 중진국의 경제기초 E^* (중진국)을 선진국의 경제기초 E^* (선진국)으로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멀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중위 중진국에서 상위 중진국으로의 이동을 완료하고 下位 先進國으로 이동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에 걸친 경제성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E^* (중진국)을 E^*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이 기간에 일어난 변화를 일별해 보면 貯蓄率과 投資率이 전 시기보다 5% 포인트 정도 낮아졌으며, 총노동시간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가 아주 많아 青年 失業率이 크게 높아졌고, 교육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교육의 성과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교육 서비스 수입 즉, 해외 유학생 증가 추세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어 있으며 시장친화적인 정책수행의 입지가 대폭 좁아졌다.

(10) 이는 달러화로 계산한 1인당 소득 증가율을 뜻한다. 1962년에 400달러 정도였던 1인당 소득이 2006년에 17,000달러가 되어 44년 동안에 43배 증가했으므로 이를 성장률로 환산하면 약 8.5%가 된다.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두고서 자율과 경쟁과 창의와 개방을 지향해오던 開放型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이념과 제도가 社會主義와 重商主義的 요소를 가미한 混合經濟의 이념과 제도로 회귀하고 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 등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풍조가 일고 있고, 있는 자의 것을 없는 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일로 간주된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과 북한을 더 중요시 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건 포용하고 도와야 한다는 민족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관용성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일정한 정도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요소 투입량 증가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기술진보율과 경제운영의 효율성에 의해 정해지는) 생산성 증가율도 둔화되었음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經濟의 基礎를 E^* (중진국)에서 E^*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동안 키워온 성장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달러화로 평가한 1인당 소득이 1995년의 10,000달러에서 2006년의 17,000달러로 연 4.8%씩 성장한 것도 1962년의 400달러에서 1995년의 10,000달러로 연 9.8%씩 성장한 것에 비추어 비관적인 전망을 낳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1995년 이후에도 196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실현했던 (달러화로 계산한) 성장속도를 유지했다면 2006년에 이르러 1인당 소득이 28,000달러로 늘어나 이미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비관적 전망을 낳는다.

4.3. 未來

이러한 여러 가지 징표가 가리키는 바는 우리나라가 현재 經濟의 生産能力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소인 E^* 또는 z_t 의 질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식 (2.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 는 그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소들에 의해 정해지므로 여간해서는 변화하지 않지만 z_t 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하기에 따라서 한 동안 마이너스, 제로, 또는 플러스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념, 사상, 역사, 문화와 같은 요소들 그리고 자본재 투자율의 장기 평균치, 교육투자율의 장기평균치, 인구증가율의 장기평균치, 장기적 기술진보율 등이 E^* 를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반면 z_t 는 투자율의 일시적인 등락, 인구증가율의 일시적인 등락, 장기추세를 벗어난 일탈적 정책 등에 의해 정해진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우리나라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발전 속도의 상대적인 정체는 주로 그 동안 플러스 값을 유지해오던 z_t 가 지난 10년 사이에 제로 또는 마이너스 값으로 악화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정도의 퇴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시정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E^* 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빠른 시일 안에 E^* 의 악화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上位 中進國으로 이동하던 발전추세가 반전되어 다시금 中位 中進國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의 경험을 볼 때 더 걱정스러운 것은 E^* 가 악화된 것이 원인이 되어 경제가 퇴보하기 시작하면 퇴보의 추세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저축률 및 투자율의 하락, 노동능률의 저하, 실업률의 상승, 교육의 저질화, 反기업 정서의 확산, 수월성 폄하풍조 만연, 市場論理를 무시하는 정책의 일반화, 社會主義的 요소들의 득세, 閉鎖的 民族主義의 대두 등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힘을 얻는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 즉, 참된 의미의 先進國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과연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에 관해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일견 이는 말도 안 되는 물음인 듯하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에 걸쳐 전개된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이 위의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거가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진국이 되는 것보다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와 지식인과 권력자는 잘못된 과거체제의 산물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며 가난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와 힘이 없는 자는 과거체제의 희생물이므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既得權層은 군부독재에 협조하는 것을 통해 성공했음에 반해 民主化 勢力은 오랜 세월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낙오하였으므로 전자의 것을 가져다 후자의 아픔을 보상해 줌이 마땅하다. 또한 그들의 생각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한반도의 분쟁상황을 심화하는 반평화분자이며 과거 군부독재에 협조한 민족의 배신자이므로 마땅히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며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수구반동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들이 지상에 오르내리고 또한 그와 같은 생각들을 반영하는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선진국이 되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직접 대놓고 물어보면 이들도 선진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대답을 한다. 다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둔 채 선진국이 되는 것은 가치가 없으므로 먼저 잘못을 고쳐야 하며 잘못을 고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퇴보를 경험할지라도 그것은 더 바람직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대가이므로 감수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부자는 자꾸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자꾸만 더 가난해지는 兩極化 現象이라고 한다. 그들은 양극화 현상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들이 모두 우리나라가 開放型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채택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부터라도 社會主義的 요소를 가미한 약간은 閉鎖的인 政府主導型 混合經濟로 바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남미형 발전모형과 북구형 발전모형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으며 영미형 발전모형을 혐오한다.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믿으며, 개혁과 개방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자는 사람들을 민족반역자이자 반평화 세력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소수이므로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좀처럼 불식시키기 어려우며 마약과 같은 성격을 지녀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생각들이 고착되지 않도록 그리고 널리 퍼져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수의 실증적인 증거를 들어 그와 같은 생각들이 그르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닌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개방형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해 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님을 이해시켜야 한다.

E^* (중진국)을 E^* (선진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하나의 답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더라도 무지와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다수 국가의 장기간에 걸친 經濟發展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實證研究를 통해, 평균적인 경향으로 볼 때 무엇이 E^* (선진국)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인지 규명해 낼 수는 있다. 실제로 지난 4반세기에 걸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해 온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에 이르렀다.

물론 모든 일에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게 마련이므로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도출한 답이 100%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그 동안의 연구에서 얻어낸 合致된 見解(consensus) 가운데서 틀릴 확률이 낮은 것부터 시행에 옮기는 지혜를 발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반면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결론은 더 많은 증거가 수집되어 신뢰도가 높은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실행을 유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合理的인 論議(rational discourse)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라도 그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논의의 주체인 인간의 본질적 유한성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서 선진국 또는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건설에 매진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것도 몇 년간 인센티브를 주었다가 마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본 방향이 그쪽으로 확고하게 간다는 굳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주체들에게 있어 가장 지속적

이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 것을 인정하는 私有財産權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며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經濟的自由와 내 것을 까닭 없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남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내 생명에도 위해가 가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적 자유의 허용, 공정하고도 치열한 경쟁을 통한 자율조정, 인명과 재산의 철저한 보호 등과 같은 가치들이 한 나라의 체제와 제도와 규범과 정책에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때 모든 경제주체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래야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 근로의욕이 높아지며, 학습열이 제고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며, 기업가 정신이 피어나고, 창발성이 제고될 것이며, 경제의 다이내미즘이 폭발적인 기세로 솟아날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갖가지 進入障壁을 크게 낮춤으로써 健全한 競爭을 유도해야 한다. 전면적인 對外開放을 통해 상품, 서비스, 원료, 중간투입물, 자본재, 자본, 아이디어, 기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내외를 망라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국가 간 사람의 이동도 크게 자유화해야 한다.

물론 民間部門의 자율적이고도 자율적인 경쟁과정이 언제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경쟁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이처럼 민간부문이 스스로의 경쟁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政府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개방형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규범을 제정하여 누구나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公共財의 경우처럼 민간부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맡아야 하며, 민간부문의 自律競爭體制가 더 잘 작동하도록 보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외부 또는 내부로부터의 적에게서 선량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도 물론 정부가 맡아야 한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맡음에 있어서 유념할 것은 정부가 맡아야 할 일의 범위와 내용이 經濟發展의 段階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경제개발의 전기 단계에서 남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정부가 담당했던 역할을 보면 홍콩을 예외로 하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해 상당한 정도 개입하는 開發主導型 政府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 이전의 일본 그리고 현재의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의 일본과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싱가포르를 보면 그들은 이미 民間部門을 補助하는 형태의 정부로 전환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위 중

진국 수준을 넘어 상위 중진국으로 이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적 자유의 전면적 허용,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 유도, 인명의 보호,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정부를 골자로 하는 經濟活動의 外部的 基礎가 선진국적인 것으로 변화되면, 저축률, 투자율, 노동증가율, 노동효율성, 교육투자율, 교육효율성, 금융효율성, 연구개발 투자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선진기술 흡수율, 자체 기술 개발 속도 등 經濟活動의 內部的 基礎 역시 선진국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의 외부적 기초를 선진국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 내야 할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경제활동의 내부적 기초는 거의 자동적으로 선진국적인 것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경제활동의 외부적 기초가 선진국적인 것으로 바뀌면 변화된 인센티브 아래서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경제활동의 내부적 기초가 선진국적인 것으로 바뀌는 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4.4. 國際情勢와 우리의 未來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지난 세기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世界化의 큰 물결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해질 것이다. IT 革命의 진전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으며 여러 방면에 걸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존재하던 기존의 경계를 급속도로 허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아주 단기간 안에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經濟圈을 이루면 살아가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북미 및 유럽 지역과의 유대관계 역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이 시점에서 對外開放 및 國際關係에 관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시대의 우리 국가위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와 관련을 맺는 주변국가에 견주어 보면, 캐나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선진국이고 대만, 멕시코, 칠레, 타이, 말레이시아, 그리스, 터키 등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경쟁자이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추격자이다. 앞선 나라를 쫓아가 선진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뒤진 나라들에게 추월당할 것인가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물결을 헤치고 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는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국가 등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예상되는 國際情勢 變化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對備策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전히 강한 힘을 떨치고 있는 重商主義的 觀念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우리는 국제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내국인,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문물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좋게 보고 외국인, 외국 기업, 그리고 외국 문물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나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21세기를 맞아도 여전히 폐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國粹主義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미래의 시기가 갖는 여러 특징 중 우리에게 가장 큰 힘으로 다가올 트렌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國境 없는 時代'가 도래하는 것이다.⁽¹¹⁾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의 전 경제주체들이 나라와 나라를 구분 짓지 말고 전 세계를 우리의 활동 영역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한 우리나라와 남의 나라를 구분 짓는 전 시대적 사고방식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世界化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면 世界化의 주력이 될 人材를 길러야 한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멀지 않은 장래에 1日 生活圈을 형성하게 될 것이므로 그 어느 곳에서도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아시아인을 길러야 한다. 물론 미주, 대양주 및 유럽 지역으로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므로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아시아인을 넘어 世界人을 길러내는 것이다. 한편 세계인을 양성함에 있어 그 대상이 반드시 '內國人'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상되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처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北韓과의 關係이다.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 선진국을 향한 남한의 역정이 얼마나 순탄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변화는, 북한이 改革과 開放으로 나가고 남한이 이

(11) 이에 관해서는 이지순 외(2006)를 보라.

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北韓經濟가 베트남이나 중국이 밝아온 전례를 따라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남한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북한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후발주자의 이점과 남한의 지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발전 속도를 남한의 그것보다 빠르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므로, 남한과 북한과의 경제력 차이도 시간이 흐를수록 좁혀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두 지역의 經濟統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¹²⁾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476

팩스: (02)886-4231

E-mail: jisoon@snu.ac.kr

參 考 文 獻

이지순(2004):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 경제통합에 대한 합의』,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지순 외(2006): 『메가트렌드 코리아』, 한길사.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2004): *Economic Growth*, 2nd edi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Jones, Charles I.(2002): *Introduction to Economic Growth*, 2n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Weil, David N.(2005): *Economic Growth*, Boston, Addison Wesley.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various years.

<http://econ.worldbank.org>

(12) 남한과 북한 경제의 통합 가능성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의 예로 이지순(2004)을 보라.